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3-19호 | 2023년 6월 12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정태호 | idp.theminjoo.kr

지금 추경이 필요한 5가지 이유

채은동 연구위원

《 요약 》

■ 추경이 필요한 5가지 이유

① 위기에 몰린 국민부터 살리자

- 소득하위 20%의 적자가구 비중 : (22.2Q) 53.7% → (22.3Q) 57.7% → (22.4Q) 59.5% → (23.1Q) 62.3%
- 전세사기 등으로 예산 소요 증가 : 경기도는 피해가구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추경 예정

② 국가재정보다 국가경제부터 살리자

- 우리나라 성장률 모두 하향조정 : IMF(2.0% → 1.5%), OECD(1.8% → 1.5%), 피치(1.9% → 1.2%)
- 상저하저 및 경제 경착륙 : 소비, 지출, 순수출 모두 부진한 가운데 재정건전화에 발목 잡힌 정부지출

③ 하락한 물가상승률이 추경부담을 덜었다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④ 윤석열 정부도 실은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했다

- 현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야당의 상반기 추경 요구를 반대했으나, 상반기에 재정 집중 투입
- 윤석열 정부의 총지출 진도율(1분기)은 문재인정부 2022년과 유사 : ('22년) 29.8% ('23년) 29.2%
- 관리재정수지는 오히려 문재인정부 2022년보다 8.5조 원 적자 확대 : ('22년) -45.5조 원 ('23년) -54.0조 원

⑤ 예산대비 38조 원 세수결손을 숨길 수 없고, 과거에도 추경으로 세입을 조정했다

- 4월기준 예산 대비 세수결손 38.4조 원 : ①전년대비 실적감소 33.9조 원 ②전년대비 예산증액 4.5조 원
- 4월 실적만 반영한 올해 세수오차율은 -9.6%로, 1998년 -11.8% 이후 최대치 결손
- 최근 20년 동안 세수결손이 3조 원 이상 발생한 5회 중 4회('09,'13,'15,'20)는 추경을 통해 세입조정

■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 (제89조) '중대한 세수결손'을 추경 요건에 포함 → 논쟁 없이 추경 돌입

○ (제88조) 법률 위반이 확실한 국세감면을 법정한도를 준수하고, 권고사항을 의무화할 필요

- 세수결손으로 국세감면을 법정한도를 위반할 가능성 확실 : 법정한도 14.3% < 15.1% 현재 수정치

▶ 키워드: 추가경정예산, 세수결손, 국가재정법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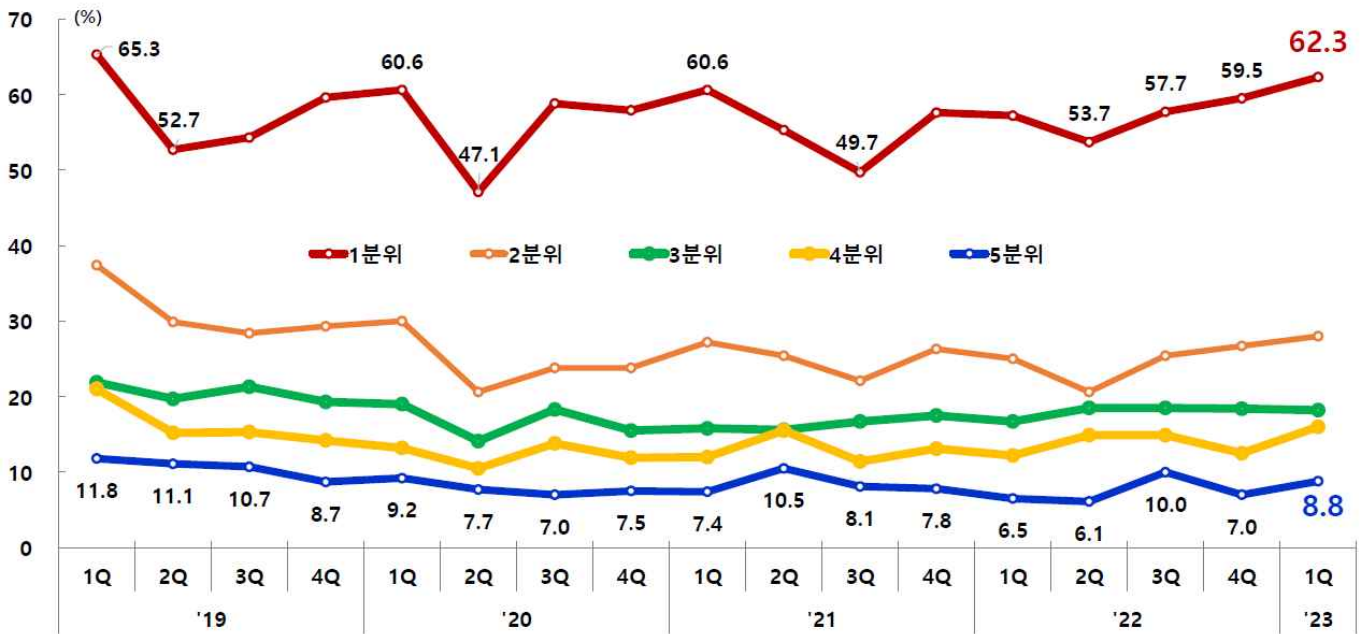
1. 추경이 필요한 5가지 이유

(1) 위기에 몰린 국민부터 살리자

- 소득하위 20% 가구의 1분기 적자가구 비중 : ('20-'21년) 60.6% ('22년) 57.2% ('23년) 62.3%
- 소득하위 1분위 : 적자액 15만 원 증가 ('22.1분기 -31만 원 ⇒ '23.1분기 -46만 원)
 - 소득 3만 3천 원 증가 : 근로소득 3천 원 감소, 사업소득 2만 5천 원 증가 등 총 108만 원
 - 지출 18만 원 증가 : 연료비 2.6만 원(26.1%↑), 보건의료비 3.3만 원(21.7%↑), 식사비 3.4만 원 (31.8%↑)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계지출은 13.3% 급증한 154만 원
 - 적자가구 분기별 비중 : (22.2Q) 53.7% → (22.3Q) 57.7% → (22.4Q) 59.5% → (23.1Q) 62.3%
- 전체 가구 : 흑자 16만 원 감소 ('22.1분기 133만 원 ⇒ '23.1분기 117만 원)
 - 소득 23만 원 증가, 지출 39만 원 증가
 - 소득하위 2분위-5분위의 적자가구 비중은 30%를 하회하고 안정적인 흐름 유지

<그림 1>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적자가구 비율 추이 : 2019년 - 2023년 1분기

(단위: %)



자료 : 통계청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한 홍성국 의원의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발표자료(2023.6.8.) 인용

- 전세사기 등으로 예산 소요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대체하는 실정
 -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주택 예산 5조 원 삭감으로 인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
 - 2022년 7월-2023년 5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피해자는 2,966명(20-30대 54.9%), 피해금액은 4,599억원 규모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설문조사(응답자수 393명) 결과, 경제적 생활고가 심해졌다는 응답이 78.9%이며, 노동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이 53.4%(경향신문 보도자료, 2023.6.6.)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3천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씩 지원하는 추경 편성

(2) 국가재정보다 국가경제부터 살리자

- 우리나라 성장률 하향조정 : IMF(2.0% → 1.5%), OECD(1.8% → 1.5%), 피치(1.9% → 1.2%)
 - OECD의 한국 성장률 지속 하향조정 : (22.11월)1.8% → (23.3월)1.6% → (23.6월)1.5%
 - 금융연구원 1.3%, 한국은행 1.4%, KDI·국회예산정책처 1.5% 등

<표 1> 전망 시기별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p)

	전망 시기		세계			우리나라		
	기존	갱신	기존	갱신	변화분	기존	갱신	변화분
IMF	22.10월	23.04월	2.7	2.8	+01	2.0	1.5	-0.5
OECD	22.11월	23.06월	2.2	2.7	+0.5	1.8	1.5	-0.3
피치	22.09월	22.12월	1.7	1.4	-0.3	1.9	1.2	-0.7
한국은행	22.11월	23.05월	2.4	2.5	+0.1	1.7	1.4	-0.3

자료 : IMF, OECD, 피치, Bloomberge,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정리

○ 높아지는 상저하저(上底下低) 및 경제 경착륙(耕墜陸)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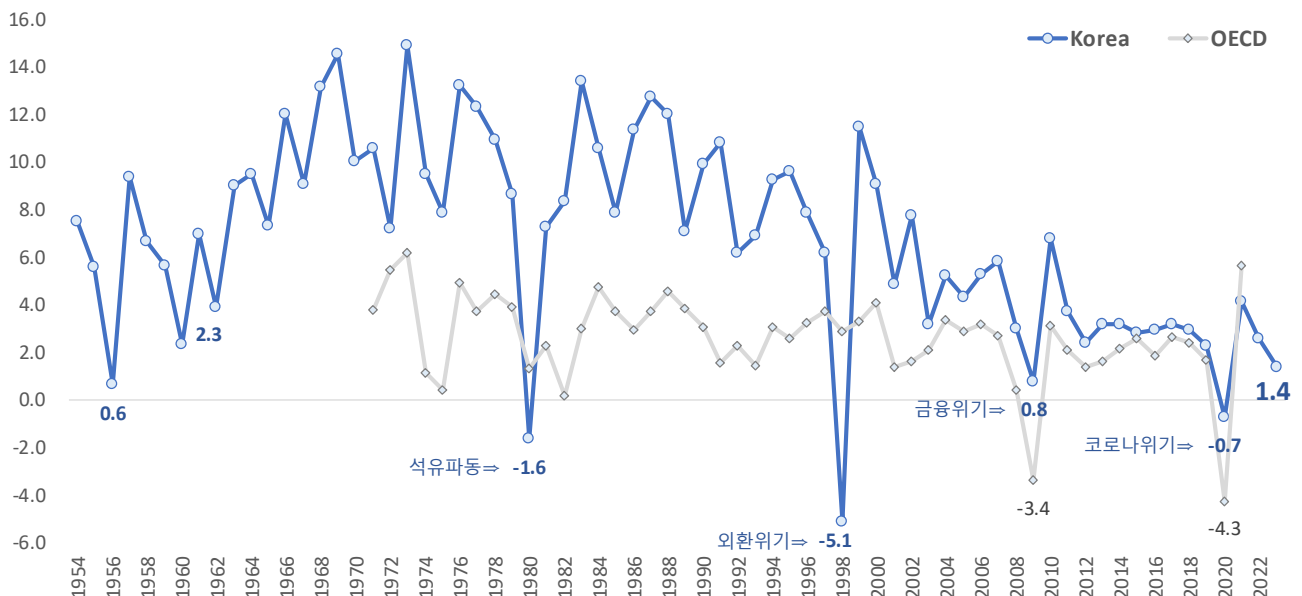
- 성장을 견인할 만한 수요 요인이 없음(현대경제연구원, 2023.6)
 - 성장의 수요측 요인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로 구분
 - 소비절벽, ICT투자 침체, 건설설비투자 불황, 수출 불황 자기화 등 민간부문의 성장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재정건전화로 인해 정부지출에 의한 성장까지 제한된 실정
- 정부부채 비율은 여유가 있음(2021년) : 우리나라(11위) 51.5% < 35개 선진국 평균 117.9%

○ 2023년 경제성장률은 1.5% 내외로 전망되며 이는 역대 6번째로 나쁜 기록 추정

- 현재의 정부역할 부재는 과거 석유파동,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통제불가능한 경제상황과 대조

<그림 2>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 : 1954-2023년

(단위: %)



주 : 2023년 성장률은 IMF, OECD, KDI,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경제전망치 1.5% 인용

자료 : OECD Statistics 자료를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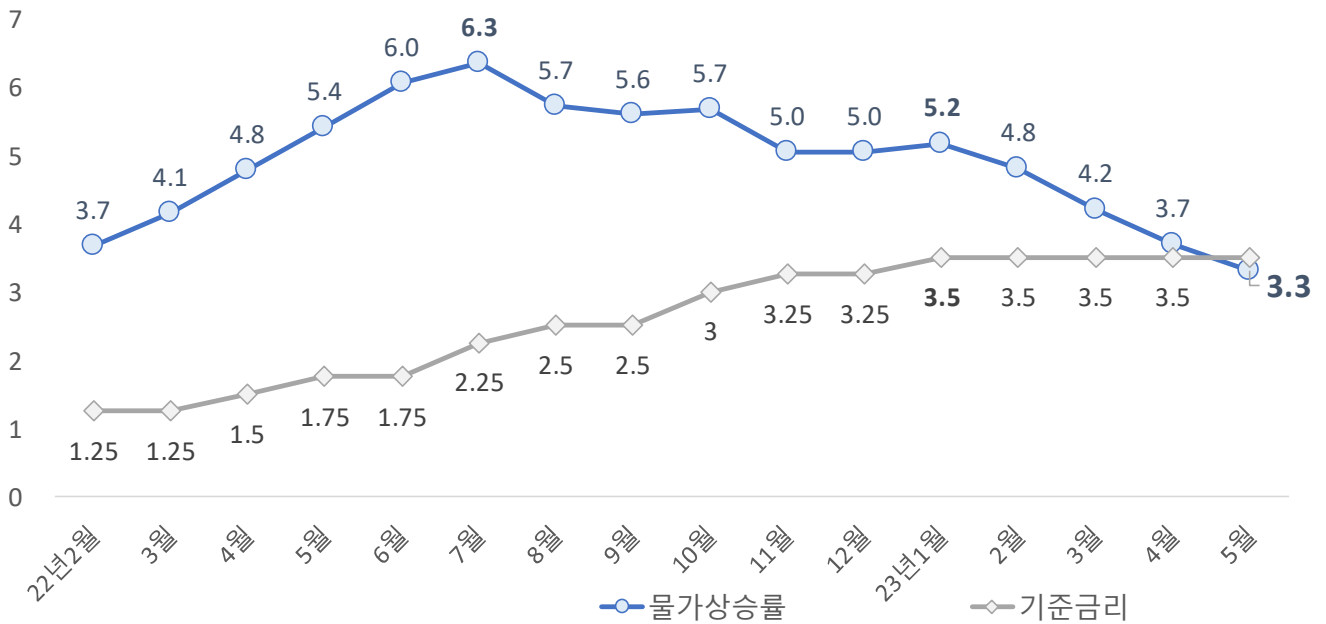
(3) 하락한 물가상승률이 추경부담을 덜었다

○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 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정점 6.3% 이후 하락하여 2023년 5월 현재 3.3% 시현
 - 2023년 1월은 정부의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다시 물가상승률 증가
- 라면(13.1%), 닭고기(14.8%) 등 일부 항목의 물가상승률이 높으나, 전체적인 지수는 추경으로 인한 물가상승 자극 우려가 일부 불식된 상황

<그림 3> 물가상승률 및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자료 : 통계청 월별물가지수,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4) 윤석열 정부도 실은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했다

○ 정부는 재정건전화로 이유로 1월 야당의 추경 요구를 반대

- 민주당은 올해 1월 “긴급 민생 프로젝트(예산 30조 원)”을 발표하며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
 - 예산 30조 원은 명목 GDP 대비 1.3%-1.4% 규모
 - 주요 내용 : 물가지원금 5조 원, 공공임대예산 5조 원 등 민생예산 포함
- 추경호 장관은 ① 본 예산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② 추경의 물가 자극 가능성 ③ 추경에 따른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 ④ 이로 인한 금리인상 자극 등을 이유로 추경 반대

○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의 조기 투입을 통해 집중적으로 국가재정 사용

- 2023년 1분기 총지출은 186.8조 원으로,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29.2%
-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만, 총지출의 예산 대비 진도율을 보면 2022년 1분기와 유사한 수준
 - 예산 대비 진도율 비교 : (22.1분기) 29.8% (23.1분기) 29.2%

- 정부는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집행 관리 대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3월 집행률은 34.1%(전년동기대비 10.8조 원 증가)
 - 관리대상 : 47개 중앙행정기관 47개, 기금 40개 등 242.9조 원 예산
(전체 총지출 638.7조 원의 38.0%에 해당)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 성적표는 최악 수준

- 재정건전성 핵심지표인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코로나19의 심각성이 대두된 2020년 1분기와 유사
- 게다가 2023년 1분기 실적은 문재인정부의 2022년보다 적자폭이 8조 원 확대

<표 2> 1분기 재정수지 추이 : 2016-2023년

(단위: 조 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현 정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4.1	-3.9	-1.8	-17.3	-45.3	-30.1	-33.1	-41.4
관리재정수지	-23.4	-14.1	-10.5	-25.2	-55.3	-48.6	-45.5	-54.0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자료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정리

○ 하반기 총수입이 부족한 가운데 총지출까지 감소할 경우 재정절벽 및 경제절벽 직면 가능성

- 총수입(예산 625.7조 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400.5조 원)은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총지출은 상반기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경기하강을 막지 못함
- 법인소득이 감소한 법인세의 중간예납, 자산시장 침체 유지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 국세수입 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우며, 하반기 지출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재정을 통한 경기하강의 방어가 어려울 경우 경제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긴급 민생 프로젝트(예산 30조 원) >>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월 당대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30조 원(명목GDP 대비 1.3-1.4%)의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

1.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 1천억 원
2.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이자감면 : 7조 4천억 원
3.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정비용 감면 지원 : 3조 원
4. 취약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 1조 5천억원
5. 에너지 물가지원금 : 7조 2천억 원
소상공인, 영업자, 농어민에 대한 가스·전기요금 지원 : 3조 2천억 원
6.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제도화 : 7천억 원
7.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 5조 원
8.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 280억 원
9. 부동산 PF 배드뱅크 설립 : 2조 원

(5) 예산대비 38조 원 세수결손을 숨길 수 없고, 과거에도 추경으로 세입을 조정했다

- 예산대비 세수결손 -38.4조 원 : ①전년대비 실적감소 33.9조 원 ②전년대비 예산증액 4.5조 원
 - 국세수입 실적 33.9조원 감소 : 1-4월 누적 전년대비 법인세 -15.8조 원, 소득세 -8.9조 원 등
 - 국세수입 예산 4.5조 원 증액 : (2022년) 395.9조 원 ⇒ (2023년) 400.5조 원
 - 정부는 2023년도 국세수입이 11조 원 자연 증가할 것으로 전제한 후 6조 원의 감세정책 실시
 - 세법개정의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 '23년 -6조 원 '23~'27년 -64조 원(연평균 13조 원)
 - 예산은 4.5조 원 크게 잡고 실적은 33.9조 원 감소하여, 4월 현재 세수결손액 38.4조 원

○ 올해 세수오차율*은 최근 20년 동안 최대로 하락한 -9.6%로 추정되며,

과거 세수결손이 3조 원 이상 발생한 연도 5회 중 4회(80%)는 추경을 통해 세입 조정

* 국세수입 오차율(%) = (실적액 - 당초예산액) / 당초예산액

- 4월 기준 세수오차율 : -9.6% = -38.4조 원 / 400.5조 원
- 최근 20년 동안 오차액이 3조 원 이상 발생한 5회 중 4회(80%)는 추경을 통해 세입 조정
 - 마이너스 세수오차 : 7회 (2009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9년, 2020년)
 - 세수오차 3조 원 이상 : 5회 (2009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 세입결손액 추경 반영 : 4회 (2009년, 2013년, 2015년, 2020년)

<표 4> 국세수입 예산, 추경, 결산 추이: 2004-2022년

(단위: 조 원)

	본예산 (A)	결산 (B)	세수오차 (C=B-A)	세수오차율 (C/A)	추경 횟수	추경예산 (B)	추경예산 변화분 (C=B-A)	비고
2004	111.2	117.8	6.6	5.9%	1회	111.2	-	
2005	124.4	127.5	3.1	2.5%	1회	130.6	6.2	
2006	135.3	138.0	2.7	2.0%	1회	135.3	-	
2007	147.3	161.5	14.2	9.6%	-	-	-	
2008	165.6	167.3	1.7	1.1%	1회	165.6	-	
2009	175.4	164.5	-10.9	-6.2%	1회	164.0	-11.4	세수결손, 세입경정
2010	170.5	177.7	7.3	4.3%	-	-	-	
2011	187.6	192.4	4.8	2.5%	-	-	-	
2012	205.8	203.0	-2.8	-1.4%	-	-	-	세수결손
2013	216.4	201.9	-14.5	-6.7%	1회	210.4	-6.0	세수결손, 세입경정
2014	216.5	205.5	-11.0	-5.1%	-	-	-	세수결손
2015	221.1	217.9	-3.3	-1.5%	1회	215.7	-5.4	세수결손, 세입경정
2016	222.9	242.6	19.7	8.8%	1회	232.7	9.8	
2017	242.3	265.4	23.1	9.5%	1회	251.1	8.8	
2018	268.1	293.6	25.4	9.5%	1회	268.1	-	
2019	294.8	293.5	-1.3	-0.5%	1회	294.8	-	세수결손
2020	292.0	285.5	-6.5	-2.2%	4회	279.7	-12.3	세수결손, 세입경정
2021	282.7	344.1	61.4	21.7%	2회	314.3	31.6	
2022	343.4	395.9	52.5	15.3%	2회	396.6	53.2	
2023^f	400.5	362.0	-38.4	-9.6%	-	-	-	

주 : 2023년 결산액, 세수오차액, 세수오차율은 1-4월 국세실적을 바탕으로 민주연구원 추정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의 역대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2. 국가재정법 개정사항

(1) '증대한 세수결손' 추경요건 포함

○ 현재 세수결손 규모는 오차율 기준으로 1998년 -11.8% 이후 최대로 하락한 -9.6%

- 4월 기준 세수오차율 : $-9.6\% = -38.4 / 4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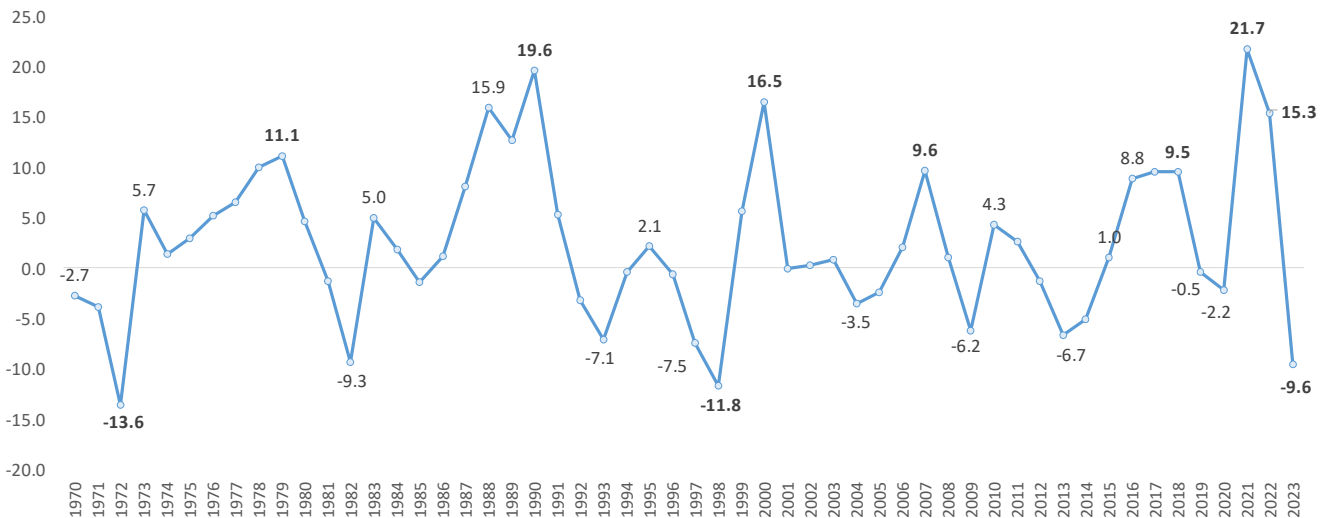
• 4월 기준 세수결손액 : -38.4조 원(예산 증액분 4.5조 원 + 실적 감소분 33.9조 원)

• 4월까지 세수실적 감소분만 반영하는 등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며, 일부 전문가 의견(-70조 원 감소)을 가정하면 세수오차율은 -18.6%로 역대 최소 수치

- 보수적으로 세수오차율을 가정하더라도,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11.8% 이후 최대 하락폭 세수감소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역대 최대의 세수오차 발생 가능성

<그림 4> 국세수입 오차율 추이 : 1970-2023년

(단위: %)



주 : 1970-2014년 수치는 심혜정(2015)¹⁾ 인용, 2015년~2022년 수치는 저자 계산. 2023년 세수결손액은 1-4월 누적 국세수입(-33.9조 원)을 감안한 -38.4조 원으로 추정

자료 : 심혜정(2015), 국세통계연보, 의안정보시스템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 외국은 경제 및 재정에 대해 수정 보고서를 매년 발표

- 미국 : 의회기관 및 민간연구소에서 경제와 재정에 대한 수정전망을 지속적으로 발간

• 의회예산처 : 매년 1~5회* '재정 및 경제 전망(Budget and Economic Outlook)' 발간

2023년 올해는 변동성이 커서 6월 현재 2회에 걸쳐 수정 전망치를 발표

- 캐나다 : '경제 및 재정 수정전망(Economic and Fiscal Update)' 매년 발표

• 재무부가 향후 5년간의 경제 및 재정여건에 대한 전망치를 작성. 약 20개 민간 경제전망 연구소의 전망치를 참고하여 5년간의 경제전망치 합의. 이를 바탕으로 재정전망 수치를 발표

- 뉴질랜드 : '경제 및 재정 수정전망(Economic and Fiscal Update)'을 매년 5월에 발표

• 2023년도 예산 전망 수정 : 경제('23.3.29.) → 세입(4.5.) → 재정(4.27.) → 채무(5.4.) → 최종(5.10.)

1) 심혜정, "세수오차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재정학연구」 8권 2호(통권 85호), 2015, pp.1-44

-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요건에 ‘중대한 세수결손’을 추가하여, 중대한 세수결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불필요한 논쟁 없이 추경(세입경정)에 나서도록 함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추가) 4. 정부의 세입예측 실패,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국세수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준수 및 권고사항을 의무화할 필요

-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함
 - 재정준칙(fiscal rules) :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한도를 두어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에 제약을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재정운용체계
 - 기획재정부 방안 : 관리재정수리 적자 한도를 GDP 대비 -3%로 설정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2%로 축소
- 현행 「국가재정법」은 재정건전화(제5장)와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를 명시
 - 재정수반 법률안 비용추계(§87), 국세감면의 제한(동법§88),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89) 등
 - 국세감면의 제한 : 국세감면을*이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
 - * 국세감면액 / (국세수입 + 국세감면액)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올해 세수결손으로 인해 법률에 규정한 “재정건전화” 요건을 위반할 가능성 확실히 됨
 - 기획재정부는 2022년 말 예산 편성 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는 것으로 발표
 - 당초 예산안 편성(22.9월) 시 발표 : 국세감면율 13.9% < 법정한도 14.3% ⇒ 법률한도 만족
 - 현재 국세수입이 감소하여 이미 있는 재정건전화 규정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 농후
 - 1-4월 세수결손 반영(보수적 가정) : 국세감면율 15.1% > 법정한도 14.3% ⇒ 법률한도 위반

<표 3> 국세감면을 및 법정한도 : 2023년

(단위: 조 원)

항목	기획재정부 추정치('22.9.)	민주연구원 추정치('23.6.)		비고
		시나리오1 (-34조 원)	시나리오2 (-70조 원)	
조세지출액(A)	69.3	69.3	69.3	동일 금액으로 가정
국세수입총액(B=B1+B2)	428.6	388.4	349.7	
- 국세수납액(B1)	400.5	362.0	325.9	세수감소분 반영
- 지방소비세액(B2)	28.2	26.4	23.8	부가가치세 감소분 반영
추정국세수입총액(C=A+B)	498.0	457.7	419.0	조세지출 없는 경우 국세수입
국세감면율 (A/C)	13.9%	15.1%	16.5%	
법정한도	14.3%	14.3%	14.3%	(14.8 + 13.5 + 13.1)/3 + 0.5
법정한도 만족 여부	만족	위반	위반	

주 : 시나리오1은 4월 현재 국세감소분만 반영한 것이며, 시나리오2는 전년대비 세수감소분 70조원 가정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세감면 제도부터 충실히 지키고 해당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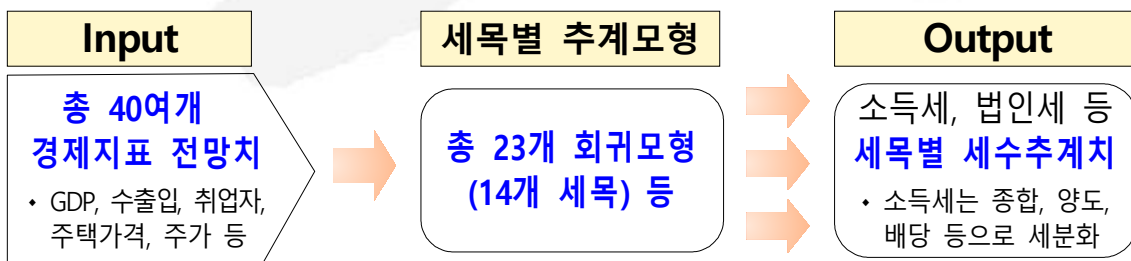
- 국세감면액 : 2008년 29조 원 ⇒ 2023년 69조 원. 매년 6.0%씩 증가
- 「국가재정법」제88조 : 권고조항(노력하여야 한다) → 의무조항(하여야 한다)

(3) 세수추계 모형 공개 및 점검

○ 정부의 세입전망 오류, 경제상황 변화 등에 의해 당초 세입전망과 실제 세입이 다른 경우 발생

- 국세수입예산은 ① 경제지표 전망치 등을 활용한 기준선대비 국세수입과 ② 세법개정의 예산연도 세수효과를 합산하여 추정
 - 기준선대비 국세수입 전망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감독 하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추정
 -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추정치 : 기획재정부 세제실(정부안),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의원안)

<그림 4> 세수추계 흐름도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 2022.2.11.

○ **세수오차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과거 설명과 반복되는 세수오차**

- 기획재정부는 세수오차에 대해 ① 추계모형의 한계 ② 세제실 중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문제 ③ 이상징후 대응체계 미흡 ④ 사후평가 및 피드백 부족 등으로 설명(2022.2.)
 - 기재부는 2021년 세수오차에 대해서는 ①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 ②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세수추계 모형의 설명력 저하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대응방안을 발표
- 그러나 기재부는 3개월 후 2022년 5월 53.3조 원의 세수오차를 시인하고, 추경예산을 편성

○ **반복되는 세수오차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

- 세수추계는 기획재정부, 조세재정연구원이 먼저 수치를 발표하고, 예산정책처가 해당 수치를 확인한 후 추계치를 점검하는 구조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치 이후의 자료를 반영할 수 있으나, 그 전망치가 정부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 동일한 방향과 크기의 세수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세입전망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장률 및 GDP 디플레이터* 전망치, 세입 자연증가분에 대한 모형과 추정치를 예산안 편성 전에 먼저 공개하여 민간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구조 필요
 - *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값. 세입은 명목지수이므로 성장률(실질 지수)에 GDP 디플레이터를 더해 명목성장률을 근거로 세입 추정
- 세입 자연증가분(기준선대비) 수치를 예산안 결정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4) 세입, 세출예산 운용상황 등의 공개시차를 현행 45일에서 30일로 단축

○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를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공개**

- 2014년 2월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 도입 : 월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 (기존) 예산, 결산 중심의 연간 단위 재정 정보 제공 ⇒ (개정) 재정정보 실적을 적시에 투명 공개
- 2015년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 온라인 공개
 - 중앙정부 예산회계는 “디브레인(dBrain)”을 통해 이미 운용됐으며, 일부 자료를 가공하여 공개

○ **자료공개 시차 : 국세수입 30일, 총수입 및 총지출 등 종합적인 국가재정 45일**

- 국세수입 : 5월 말에 4월까지 통계 발표 ⇒ 자료공개 시차 30일
-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정부부채 : 5월 중순에 3월까지 통계 발표 ⇒ 자료공개 시차 45일

○ **종합적인 국가재정 파악을 위해 국가재정 정보를 국세수입과 함께 공개할 필요**

- 자료공개 시차를 30일로 축소할 필요